

“미국도 한국경제 신뢰 … ‘IRA 등 기업지원 유지’에 공감”

안덕근 산업장관 방미 후 간담회

미국 방문해 양국 협력 방안 논의
美 의원들, 韓 기업 투자 중요성 공감
한미, IRA 통한 기업지원 지속 협의
체코 원전 수출, 한미 MOU 긍정적

11차 전력계획 확정, 야당 설득 노력
“민생 안정 시, 전기·가스요금 정상화
국정 공백에도 업무 연속성 확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탄핵정국과 관련해) 정부가 기능을 안 해서 우리 산업이 완전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안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방미 중 만난 인사들) 본인들이 봐도 지금 크게 동요가 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자기들도 한국 경제의 견조함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앞서 지난 6~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와 조지아주를 방문해 미국 상하의원 의원 등을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사실 일이 터지고 나서 (외국) 상의와 외국 투자기업들을 만나보니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더라”며 “전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조자협회와 대표도 지금까지 운영이 잘되는 것 같고 빨리 안정화시키는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는 조언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 공백 걱정을 많이 하는데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했던 우리 산업부 인력들이 다 남아있고, 저도 지금 하고 있다”며 “사람 바뀐다고 갑자기 국정 공백이 메워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

조가 바뀔 수 있는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를 지키는 게 문제는 아니다”며 “IRA를 통해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려고 했던 여러 지원 조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의원들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5년, 10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려고 했었던 기반이 된 미국 정부 지원정책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애

길 했고,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미국 조선업 강화를 위한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을 만나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협력 진전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군력을 강화하고, 관련된 조선업을 강화하려는 깊은 수준의 제도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어 조만간 여러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한미 정부가 제3국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해 당국 간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MOU에 정식 서명한 것과 관련해 안 장관은 한국 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안 장관은 “MOU를 계기로 해서 민간에서도 어떻게든 문제를 좀 건설적으로 잘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3월에 체코 원전수출 계약이 큰 문제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십을 이번에 구축했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해 심해가스전 1차 탐사시추와 관련해 안 장관은 “지금 파고들어가고 있

는 중이고, 완전히 지질 분석하기 까지 7, 8월 정도까지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며 “그 전에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5월 정도 중간발표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작년 하반기 산업용 전기요금 올릴 때도 교육지책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에너지 가격 정상화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말 꺼내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상황이 안정되면 빨리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정부 원안을 조정하더라도 야당을 설득해 조속히 확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번 정부가 출범하고 에너지정책을 안정화시키고 일관성있게 끌고 나가야 하는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다”며 “우리 에너지정책은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같이 갈 수 밖에 없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경우 너무 딜레이 되면 산업계가 굉장히 우려하므로, 어떻게든 늦지 않게 야당을 설득해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주말체험농지 확대·푸드테크 등 육성… 1200억 투자로 농업 혁신

농식품부, **崔대행** 앞 로드맵 발표
스마트농업 비중 20% 확대 목표
취득절차 등 농지제도 규제 대폭 완화
K푸드+ 140억 달러 수출 프로젝트 가속

올해 정부는 지난 30년간 지속돼 온 농지제도의 틀을 과감히 전환할 계획이다. 그간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돼 온 농지를 주말 체험농지,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우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기존의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관련 생산·연구 인프라에 1200억 원을 투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우선, 농지제도 혁신을 위해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의 규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국 각지에 주말 체험농지 목적의 농지를 허가한다.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넘기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세부 개편방안은 이해관계자, 전문가, 국회 등 의견수렴을 수렴해 상반기 내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올 한 해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에 역점을 둔다. 스마트농업의 확산을 위해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비중의 20%대 진입을 추진한다. 올 연말까지 기존의 16% 대비 4% 포인트(p) 늘리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

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한다.

전후방 신산업 촉진을 위해 총 1212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푸드테크 및 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사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정부는 ‘K푸드+’의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동지역과 남아공 등 신시장 및 미국, 중국, 일본 내 중

소도시 중심의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바이어 협의체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10대 농식품 수출전략품목을 중심으로 프리미엄화(포도·딸기), 제품개발(쌀 가공식품), 대규모 마케팅(라면) 등을 지원한다.

민생 안정을 위한 수급동향 점검도 상시 추진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에 영향이 큰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일시적 수급 위기에 대비한 공급 여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올해 공공 25.2만가구 등 주택공급… “270만 가구 달성 노력”

국토부, ‘2025년도 업무계획’ 발표
올해 ‘신축 매입임대’ 11만가구 공급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청약 추진

정부가 올 한 해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정부의 ‘270만가구 공급’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25만2000가구·신축매입 11만가구 공급… 3기신도시 등 2만 8000가구 분청약

먼저 국토부는 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11만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2000가구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이어 민간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HUG 자본확충으로 30조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가구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

난해보다 2만호 이상 늘어난 7만4000가구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가구를 포함해 2만8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6000가구 지구계획 승인, 용인이동·구리토평 등 7만1000가구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고 덧붙였다.

◆리모델링 제도 개선 등 민간주택 공급 기반 확충… 연내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또 상반기 중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 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 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CR 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상향(감정가 60%→70%)하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HUG)한다. /뉴스